제1회 조오련배 땅끝 바다수영대회 참가자들이 1일 오전 땅끝 송호해변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해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오련의 정신' 되새기며…

해남 땅끝 바다수영대회 전국 400여명 참가

종합대상 부산 강홍대씨

'제1회 조오련배 땅끝바다수영대회'가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해남 땅끝송호해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고(故) 조오련씨의 1주기를 추모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400여명의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해 '아시아의 물개'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던 조오련 선수의 정신을 되새기며 역영을 펼쳤다.

대회는 3.3㎞ 개인전과 1200m 단체 릴레이, 일반부 500m 등 3개 코스로 열렸으며 종합대상에는 3개 코스에서 모두 순위안에 든 강홍대(38·부산시 동래구 수완동)씨가 차지했다. 강씨는 3.3㎞ 개인전에서 7위로 골인했으며 4명이 한 팀으로 참가한 1200m 단체 릴레이에서는 우승을, 일반부 500m에선 2위를 차지했다.

남·여로 나뉘어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별로 치러진 3.3㎞ 개인전에선 우준영(광주시 북구 삼각동)씨가 30분4초로 종합 1위를, 배득환씨와 매케이 흘리소야(여)씨가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김재철 대회추진위원장은 "땅끝 송호해변은 조오련 선수가 꿈을 키우며 훈련했던 곳"이라며 "이번 대회는 대한해협 횡단 30주년이 되는 올해 다시 횡단에 도전하기 위해 훈련하던중 지난해 타계한 조 선수의 못다이룬 꿈을 완성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대기업 불공정 관행 어떻길래…

납품단가 후려쳐 中企 신음
문어발 사업에 영세상 고사

원자재값-납품단가 연동제 등 도입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상생·협력문제가 경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기업들은 앞다퉈 '사상 최대 실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은 그 과실을 나눠 먹기는커녕 원자재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되레 납품단가 인하 압박을 받는 등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각료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소극적인 대기업의 행태를 연일 질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불공정 거래 관행은 물론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면서 중소기업 고유영역으로 분류됐던 분야까지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중소기업들은 고사 직전에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여전=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대형 유통업체 진출을 포기했다. 제품 판로개척에 있어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지만 마진율 45%, 물류비 12% 등 대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납품단가를 맞췄다가는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47%가량은 대기업 등에 납품을 의존하고 있는 '수급기업'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 대기업의 단가 인하 요구에 울며겨자먹기로 응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실시하는 납품단가 반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가전 등 전자업체나 완성차 업체는 해마다 하도급 업체에 5% 이상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 지역상권 고사 위기=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추가 진출 시도로 인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219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됐다.

광주에서는 5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 8월3일 롯데슈퍼 신가점(입점 철회)을 비롯해 같은 달 28일 롯데마트 수완점(반려), 9월16일 롯데아울렛 수완점(반려), 올해 3월31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풍암점과 치평점(일시정지) 등이다.

최근 막걸리 열풍이 불자 영세 술 제조업자들의 영역이었던 막걸리 사업에 국순당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앞다퉈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시급=정부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보복 우려 등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대한 권한을 관련단체인 협동조합 또는 중기중앙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값의 변동에 맞춰 납품단가의 현실화를 강제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기업 불공정 행위 상시 감시기구 구성 공정위 산하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를 비롯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별도 기구가 구성된다.

1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합동 별도 기구를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가장 심각한 납품단가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은 신고하라고만 할 뿐 그냥 내버려두는 구조 아니냐"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관련 부당행위를 항상 신고할 수 있게, 범정부적인 공동 상시 점검 체제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한 중소기업 등이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구성되는 기구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갈취 등을 신고 또는 제보받거나 조사해 처리한다. /연합뉴스

"대기업 성과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나눠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고 사업파트너로서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 하계포럼 강연에서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데는 대기업 역할이 크다"고 전제한 뒤 "다만 대기업의 선전 배경에는 수많은 중소 하청업체의 분투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는 것이지 대기업의 역할과 공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논어에 나오는 '애지욕기생'(愛之 欲其生)을 인용,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배려를 재차 촉구했다.

윤 장관은 특히 납품단가 조정, 결제 관행 등 대기업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대기업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거나 "'어물전 꼴뚜기'처럼 일부가 대기업 전체를 망신시킨다"고 꼬집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당부했다.

그는 "몇 십조원 현금이 있으면서 납품사에 현금 안주고 어음 주고 어음도 일주일짜리 안주고 한달짜리 주지 않았는가", "발주도 구두로 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하면 인도받고" 등 질타성 발언을 쏟아낸 뒤 이런 얘기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대기업의 국제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강제로는 안돼"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최근 정부의 고강도 대기업 압박과 관련해 "상생협력이 강제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인 오 부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전 정권 정책 중 현 정권에서 이름이 바뀌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며 "내가 당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을 담당했다"고 입을 열었다.

오 부회장은 이어 "상생협력이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제대로 된 자발적 상생협력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기업 총수가 중소기업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납품단가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 된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상생협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서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상생협력이 안 된다"며 "그런 식으로 하면 당장은 대기업이 말 듣는 시늉은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제대로 된 협력 관계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상생협력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압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그 비율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오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견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최근 정부 정책에 우회적으로 반발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합뉴스